

資本主義體制原理의 재검토

金 元 銖*

《目 次》

- | | |
|--------------------|--------------------|
| I. 머리말 | III. 자본주의체제원리의 재검토 |
| II. 자본주의의 특성과 체제원리 | 1. 자유원리 |
| 1. 자본주의개념의 다양성 | 2. 영리원리 |
| | 3. 사유원리 |
| | IV. 맺는 말 |

I. 머리말

근간에 모경제지가 실시한 「비전코리아」라는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72.7%는 우리나라 경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본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43] p.1)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들 국민의 70여%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무엇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일까?

자본주의체제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가지 대체적인 경제체제중의 하나이다. 經濟體制란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좀발트의 정의처럼 “경제의 기본적 구성요인인 경제이념(정신)·질서(조직) 및 기술의 세 요인의 상호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경제형태”([17], [37] p.4)이다. 따라서 이는 사회경제와 질서의 기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微視的 次元에서 보면 경제주체의 “경제행위와 결과에 직접·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조직·법규·전통·신념·태도·가치·금기 및 그 결과 발생하는 행동패턴 (behavior pattern)을 포함하는 것”([14] p.337, [48] p.273)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경제체제는 自由企業體制인데 이외에도 <표 1>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등 여러 다른 체제가 있다.

이들 네 가지 체제의 특징은 <표 1>에서 보듯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하고 있

* 서울대학교 經營大學 教授

는 자본주의체제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며 어떠한 체제원리하에 운영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볼때 자본주의, 사회주의 및 혼합경제체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다른 체제원리가 적용된다.

70%이상의 응답자가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때문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이들 응답자의 인지차원과 관련

<표 1> 대체적 경제체제의 비교

체제	체제의 특징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혼합경제
기업의 소유		사유. 흔히 다수인이 소유함. 정부소유는 아주적다	약간의 예외가 있으나 정부가 소유한다	기간산업은 정부가 소유하고 소규모기업은 사유화된다	공기업과 아울러 강력한 사기업 부분이 있다. 사기업을 사회주의하에서 보다 더 규모가 크다.
영리의 권리		기업가와 투자가는 그들이 얻은 (세금과 제후) 모든 이윤은 소유권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적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기대한다	이윤은 허용되지 않음	이윤은 공식적으로 사유 부문에만 인정된다	기업가와 투자가는 사기업부들 이윤을 얻을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세금이 아주 많다. 국가기업도 전형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기대된다
기업의 경영		소유자나 그들을 대표하는 자가 각기업은 독립적으로 경영된다. 정부간섭은 아주 적다	모든 국가기업의 집권적 관리가 이루어짐은 집권적계획이 종속된다. 근간 계획은 분전화되고 있다	정부계획이 상당한 정도로 존재한다 기업은 정부관료에 의해 직접 경영된다	사기업의 경영은 자본주의와 같은 전문경영자가 국가기업도 경영한다
종업원수 권리		자신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조동조합에 가입이 인정된다	실업이 없다는 약속 대신에 종업원의 권리는 종래 제약되었다	종업원은 직업선택과 고조가 임의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취업결함에 영향을 미친다	종업원은 직업선택과 노조가입권을 가진다. 노조는 아주 강력하다
종업원수 유인(誘因)		사람들이 그들의 최대수준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도록 동기유발을 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유인이 제공됨	공산권에서는 유인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기업의 유인은 제약되는 사기업부들은 그렇지 않다	사기업부분에서는 자본주의체제와 비슷한 유인이 있다. 공기업 부분은 한정된다

(자료: [2] pp.54-55)

〈표 2〉 세가지 경제체제의 원리

체 제	행동준거	행동동인	소유양식
자유경제체제	자유	영리	사유
통제(혼합)체제	지도	공익우선	사유인정
계획(혼합)체제	명령	공익(公益)	공유(公有)

자료: [48] p.274.)

되는 문제가 해명되어야 한다.

첫째는 그들 응답자가 현실인지의 틀로서 적용한 자본주의의 본질적성격에 대한 이해의 폭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예컨대 만약 그들이 아직도 고전적 내지 19세기적인 자본주의개념을 전제로 이해하였다면 오늘날 시대마다 나라마다 다양하게 변질된 자본주의 유형이 적용되고 있다는 면에서 먼저 이에 대한 기초적 고찰이 앞서야 할 것 같다 이는 곧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당의 모색이다.

둘째는 여론조사의 결과로서 인지된 사실이 진실일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여론(public opinion)이란 “공중(公衆)으로 구성되는 공동체(public community)에 속하는 구성원이 그 동체체의 전체적이익(利害)과 관련이 있는 쟁점에 관해 가지는 의견의 종합”([40] p.141)이다. 그런데 기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환경집단인 이들 공중(public)은 군중과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인간 유형으로서 제시된 개념인데, 이는 분산하여 존재하면서 인쇄매체를 매개로 하는 정보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여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중개념을 전제로 함으로써 개인주의적 민주주의는 군중시대의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매체의 커뮤니케이션의 지배, 집단의 관료제화, 대중조작의 불가피한 필요성 등의 현상으로 특징지어지는 대중사회상황의 진전과정에서 공중개념은 그 존립기반을 잃게 되어 대중개념이 지배적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정보화(情報化)의 전개에 따라 소비자의 개성화·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이를 전제로 하는 비대중화(非大衆化: kemassification)현상이 진전되어 새로운 유형개념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은 지적대중(知的大衆: intelligent mass)개념이다. (cf.[48] pp.121-123)

이들 응답자들이 지적대중으로서의 속성을 가져 올바른 인지의 틀을 전제로 하여 인식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1면도 없지 않다. 예컨대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질적변화를 거듭

한 자본주의를 19세기적 내지 고전적인 패러다임을 전제로 인식한다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체제는 진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 응답자는 부정의 근거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경제력집중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지 않기때문”이라 하고 있는데([43] p.7) 이는 경제질서의 틀로서 작용하는 자본주의의 체제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기때문이 아닐까? 그러면 자본주의의 체제원리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 자본주의의 고유한 체제원리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본주의경제체제 원리에 입각한 성장과 번영을 지속할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체제원리가 제대로 적용될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기업환경의 핵심이 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의 본질적특성과 그 체제원리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는 시각에서 살펴 보고자 하는 것이다.

Ⅱ. 자본주의의 특성과 체제원리

1. 자본주의 개념의 다양성

1) 자본주의의 고전적개념(cf.[48] p.275)

스터디번트는 古典的 資本主義의 特質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하는 경제체제라는 점에서 찾고 있다.

첫째, 인간은 이 세계의 자연의 질서(natural order)를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다.

둘째, 경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한정된 것일 수 있고, 또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기본적 요소가 유도된다고 한다.

- ① 사유재산제도
- ② 이윤동기에 입각하는 경제적 유인(incentive)
- ③ 자유시장시스템
- ④ 정치적 및 경제적 자유

2) 자본주의개념의 다양성(cf.[48] pp.275-277)

그런데 여러 학자들이 자본주의의 성격 내지 본질을 규명하려고 정립한 개념은 서로 엇

갈려서 학자에 따라서는 이를 學問世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모호성을 가지는 개념이다. 하이에크는 자본주의를 “자본이 지배하는 經濟體制”로 정의 하였는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자본(또는 그 소유자)이 사회적으로 우대되는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즉 “토지나 원료, 공장 및 기계 등 物을 만들어내는 생산수단은 사유화되고, 생산 그 자체는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제도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生産手段을 소유하는 자본가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 이외에는 팔 것이 없는 勞動者階級과의 사이에서 기본적인 모순과 대립이 생긴다. 이러한 모순·대립은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격화한다. 생산력과 國富가 소수의 자본가의 수중에 집중·집적되는 데 비해 국민의 대다수는 노동자로 되어 간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그려지는 소박한 資本主義的 社會(capitalistic society)의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인 行爲者(actors)가 想定되게 마련이다. 하나는 이윤을 기대하여 기업(enterprise)에 참가하거나 創業을 하며 노동을 원료나 기계와 마찬가지로 생산자원으로 다루는 자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자신의 노동을 팔게끔 강제될 수밖에 없는 자로 보는 것이다.

산업과 고용면에서의 이와 같은 階級關係의 존재를 所與의 것으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적 모델하에서는 여타의 제도나 기관(institutions)은 노동자를 이와 같이 다루는 기업가의 권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관리되게 마련이라는 형식으로 결론이 유도된다. 이를 위해 한 면에서는 노동자가 체제붕괴에 이르게 할 정도의 전반적인 경제위기상황을 생기게 할 수 있는 市場力을 가지지 못하게끔 政治力이 행사되며, 다른 한 면에서는 체제내에서 생길 수 있는 위기나 모순을 무시 내지 배제할 수 있게끔 규제하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物理力(violence)의 사용과 관련되는 군대와 경찰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에 대립되는 企業家階層을 위해 위기상황하에서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노동자계층의 이익 추구와는 격리된 것으로 다루어지게 마련이라도 본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수하고 소박한 마르크스주의적인 모델은 현실사회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은 과장된 것이라고 렉스는 주장하면서 영국의 경우 산업의 중심에는 이윤동기가 있기는 하나 勞使關係는 단체협약에 입각해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들어 이와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의 자본주의의 특징적인 측면으로서 노동자로 하여금 자본가에 종속되게끔 하는 기존의 私有財産體制(system of property)의 正統性(legitimacy)에 대한 신

념을 어떻게 지속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본주의의 기본적 특질을 자본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재산의 私的 所有樣式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자본주의는 자본의 소유계층에게 기업의 지배권을 주고 있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사회의 支配階層(ruling class)의 힘과 영향력의 원천(origins)을 富의 소유와 소유권에 두었던 이유 내지 그 전통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 까닭은 그들이 스스로의 질약에 의해 축적한 생산수단인 자본의 축적·확대를 조성하려 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본주의체제는 앞서 본 바 고전적인 특질을 가지는 것이며,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비판에 부합되는 그런 유형의 것일까?

스타이너는 자본주의의 再定義(redefinition)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하일브로너 역시 같은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여러 사상가(philosophers)들이 그려낸 것과 같은 유형의 자본주의는 천천히나마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嚮導(guided), 통제, 계획자본주의—로 바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본주의가 다른 종류의 자본주의로 되어 간다는 것은 아마 다른 종류의 체제로 바뀌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대한 역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흐름(trend)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8] pp.310-311)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곧 앞서 본 바 古典的인 資本主義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어떠한 성격의 것일까? 우리는 우리의 자본주의체제를 자유자본주의라고도 한다.

그런데 트럭커는 “미국인이 ‘自由企業’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유럽에서 이해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그것과는 아주 이질적인 것이며, 또한 옛날에 식민지였던 원료 생산지역에서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와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식의 개념을 유럽에 바로 투영하거나 유럽식의 개념을 미국에 투영하려고 하면 혼란만 생기게 할 뿐이다. 실제 미국의 체제를 ‘자본주의’로 부르는 것은 이 용어가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가 생각할 때 아주 바보스러운 일”([3] p.394)이라 하고 후일 그는 미국을 年金基金社會主義의 나라로 보고 있다([5] p.2).

체제인식과 관련하여 볼때 일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용어사용상의 편향적인 관행이 있었다고 한다([25] p.334) 즉 일본에서는 종래 소련이나 동구권등의 정치경제체제를 지칭할 때 공산주의(communism)라는 용어는 피하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이러한 용어사용법은 냉전을 의식한 구미의 사용법과는 다르다 구미에서는 공산주의

라는 용어는 구소련, 동구권, 중국 등의 공산당일당지배하에 있는 경제체제에 대해 사용하고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서방측의 의회민주주의국가중에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사회민주당이나 노동당의 명칭을 가진 정당)이 집정하여 일련의 사회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의 그룹에 사용된다. 따라서 노동당이 집권한 경우의 영국은 영국사회주의(british socialism)이며 사회민주당이 많이 집권하고 있는 북구의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스칸디나비아사회주의(scandinavian socialism)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ibid., pp.334-335).

첫째 전쟁이전부터 있어온 공산국가나 공산당에 대한 나쁜 이미지나 편견을 고려하여 매크스컴이 자숙(自肅)하였기 때문이고 둘째 지식인들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진보되고 우월한 체제라는 선입관 때문에 소련형체제를 특히 정치적으로미는 무시하고 사회주의라는 一見 중립적인 용어로서 그 체제를 인지하도록 노력하여 왔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일본의 용어사용상은 관행이 우리들의 체제인식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러한 다양한 주장과 견해에 비추어 우리의 체제를 자본주의라 할 때, 이를 어떠한 유형의 자본주의로 이해하여야 할 것인지 당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것일까?

1927년에 르네상스(인간성부활)시대의 초기부터 현대까지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한 쾰발트는 자본주의의 제 3 단계, 즉 최후의 발전단계를 제 1 차 세계대전에서 비롯하여 그때까지 계속된 시기를 보았는데, 그는 이러한 시기에 다음과 같은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cf. [17] pp.195-298). 즉 그에 의하면 “그 기간중에 工業化는 전세계에 확산되고 공업국과 농업국의 격차는 축소되었다. 경제 중의 순수한 자본주의적인 요소는 ‘완전한 자본주의’로 불리는 전단계에서는 불리했었던 집단이 조직화된 자기 이익을 정치적으로 증진시키기 시작함에 따라 더욱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기업은 더욱 대규모로 성장하고 있다. 사업상의 위험은 감소되고 체계적인 계산에 입각한 경영계획이 증대되었다. 사업가의 생각이나 직관 대신에 생산, 판매, 재무 등에 관해 면밀한 예산이 수립되고 있다. 대규모의 私企業組織은 자본기업이라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처럼 되어 가고 있다. 배당률이 고정화되고 이익이 재투자가 계획되고 위험부담기능이 전문화되어 내부유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악착같은 이윤추구는 줄어들었다. 결국 資本主義精神은 일반적으로 퇴화되고 있다.” 쾰발트 이후로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뒤이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분석하여 왔는데, 오늘날 ‘純粹資本主義’가 ‘混合資本主義’로 발전하였다는 데 대해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바탕에는 자본주의체제가 갖는 특정의 결함을 배제하려고 하는 私企業과 정부의 행위에 의해 이 체제가 내부로부터 개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마르크스주의자의 이론 이외에 포라니의 “사회적 보호의 이론” 및 세이델의 “私的 資本主義抑制의 이론” 등이 있다.

오늘날 서구의 모든 비공산주의국에서 볼 수 있는 혼합경제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 어지고 있다. 그 중 대다수는 자국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아직 자본주의적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대부분의 자본배분에 대한 결정이 私的 企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커졌으므로 그것은 수정된 형태의 자본주의로 생각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본주의 앞에 형용사를 붙여 사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民衆資本主義(peoples capitalism) · 嚮導資本主義 · 福祉資本主義 · 統制資本主義 등이 그것이다([13] pp.129-130).

이에서 보듯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쓰이는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결코 앞서 본 바와 같은 고전적 내지 순수한 형태의 자본주의가 아니라 저마다 다양하게 개념화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유형의 변형된 자본주의가 있는 것일까?

2) 자본주의의 제유형

일찌기 미국의 경영사학자인 그라스는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에 따라 자본주의의 유형을 <표 3>과 같이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외에도 여러가지 다양한 유형이 <표 4>에서 보듯이 제시되고 있다(cf. [51][50], pp.351-357).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자본주의중 어느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유형일까?

3) 자본주의유형의 분류

그러면 이들 다양한 자본주의체제의 여러 유형은 어떻게 분류 · 체계화되고 있는가 이하 그 사례를 살펴 보기로 한다.

<표 3> 자본주의 유형의 구분—그라스

-
- 1) 전기업자본주의(pre-business capitalism)
 - 2) 기업자본주의(business capitalism)
 - (1) 사기업자본주의(private business capitalism)
 - (2) 공기업자본주의(public business capitalism)
-

(자료: [7] p.320, [39] p.136)

〈표 4〉 자본주의의 제유형

분류기준	명 칭	자 료 원
1. 발전단계	① 초기자본주의	[51][49] p.353
	② 고도근세자본주의	
	③ 후기자본주의	
발전단계(마르크스적 관점)	① 산업자본주의	[51][49] p.354
	• 자유경쟁단계	
	• 독점자본주의	
	② 국가독점 자본주의	
2. 지배적 자본형태	① 사업자본주의	[51][49] pp.353-354
	② 산(공)업자본주의	
	③ 독점자본주의	
	④ 수정자본주의	
발전단계(위비수견해)	① 고대자본주의	[51][49] p.354
	② 중세자본주의	
	③ 근세자본주의	
발전단계(기타 견해 1)	① 고전 자본주의	[51][49] p.356
	② 수정 자본주의	
	③ 신수정 자본주의	
발전단계(기타 견해 2)	① 소자본주의	[51][49] p.356
	② 상업자본주의	
	③ 산업자본주의	
	④ 금융자본주의	
	⑤ 국가자본주의	
3. 중심원리	① 자유 자본주의	([21] p.133)
	② 소유자본주의	([1] p.324)
	③ 통제자본주의	([50] p.358)
4. 운영중심체주체	① 법인자본주의	([24] p.384, 은행형([1] p.132)
	② 경영자자본주의	([38] p.71)
	③ 이해관계자자본주의	([45] p.11)
	④ 국가관계자자본주의	([49] p.356)
	⑤ 국가독점자본주의	([48] p.281)
5. 주수혜자	① 대중자본주의	([42] p.281)
	② 민중자본주의	([42] p.281)
	③ 대중소비형자본주의	([23] p.269)
	④ 민주적자본주의	([43] p.282)

〈표 4〉 계속

분류기준	명 칭	자 료 원
6. 성과	① 카지노식자본주의	((1] p.124)
	② 행실이 나쁜(ill behaved)	((27] p.27)
	③ 행실이 좋은(will behaved)	((25] p.352)
	④ 마피아 자본주의	((27] p.336)
	⑤ 천민자본주의(paria capitalism)	((45] p.11)
7. 지역범위별	① 구미형	((25] p.27, p.284, [28][26] p.263)
	② 아시아 개발형자본주의	((25] p.263)
	③ 유럽형	((25] p.263, [37] p.16)
8. 문화전역별	① 알펜형자본주의	((1] p.107, p.101)
	② 라인형자본주의	((1] p.126, p.222, p.325)
9. 국가별	① 미국형(America형)	((1], p.237, p.126)
	② 영국형, 19세기	((25] p.342)
	③ 앙그로색슨형	((1] p.109)
	④ 일본형	((1] p.325, [37] p.16)

1) Stakeholder capitalism인데 이를 持株자본주수를 번역하기로 한다

- ① 구미형, 일본형, ((25] p.27 및 p.38)
- ② 미국(America)형, 유럽형, 일본형((20] p.16, [25] p.263)
- ③ 앵글로색슨(Anglo Saxson)민족형 형, 라인형 ((1] p.109, p.126)

(1) 구미형과 일본형의 유형별차이

(ㄱ) 구미형 자본주의의 특징((25] pp.38-39)

그러면 양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이하 양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업은 주주가 소유하며 전문경영자에게 그 운영이 위임되어 있는 이윤추구기계(profit-seeking machine)이다. 노동자는 이 기계와 「교환의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일정한 서비스(용역)를 제공할 따름이다. 따라서 어떤 형식의 의사(擬似)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지는 않는다 구미형의 기업은 그 내부에 일본형기업에서 볼 수 있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시스템이 없다 분배문제는 기업내부에서는 해결되지 않으며 외부에 배출되어 노동시장에 위임된다. 따라서 노동자측은 노동조합이라는 독점적인 공급기구를 형성하여 정치적인 압력도 행사한다. 그리하여 분배문제는 국가라는 보다 큰 의사공동체내에서 계급

대립의 형식을 취하고 그 해결은 최종적으로 국가에 위임된다.

(L) 일본형자본주의의 특징([25] pp.35-37)

일본형자본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비유적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① 개인은 회사라는 배(= 회사공동체)의 승무원이다. 배를 위해 공헌하면 배가 얻은 이익은 승무원개인에게 분배된다.

② 좋은 성과를 올린 배는 점차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타게 되어 더 좋은 성과를 올린다. 대규모화는 강력함의 증거이고 조건이다.

③ 배가 대형화하면 배의 안정도가 높아져서 승무원은 평생 안심하고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된다.

④ 어느 한도이상의 비행(非行)을 저지르지 않는 한 승무원은 배에서 쫓겨나지 않는다. 배의 형편에 따라 하선해야 하는 경우에도 모선에서 子船으로 옮겨타도록 배려된다. 이러한 배는 바로 운명 공동체이다.

⑤ 평등주의가 요구 되어 이들을 적절히 대우하기 위한 무난한 격차·서열의 결정방식으로 연공서열(seniority)의 원칙을 따르게 된다.

⑥ 승무원은 배의 책임자와 교섭하기 위해 조합을 만드나 그것은 기업내조합이다.

⑦ 법인세가 높으므로 벌어들인 것은 자기들끼리 분배하여 배안에서는 생활을 쾌적화하는 것이 현명하다.

⑧ 선주도 배가 올린 이익의 일부를 배당으로서 요구한다. 그러나 그 배의 승무원은 그 배는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것이며(= 종업원주권) 이익은 자신들이 번 것이므로 자신들과는 무관한 선주에 이익의 상관부분을 넘겨주기보다는 자기들이 분배하거나 배를 더 크게 하기 위해 쓰는 것이 자기들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⑨ 모든 배가 그런 입장에 있다면 각 배들이 상호출자하여 서로 다른 배의 선주가 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서로 높은 배당을 하지 않아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배당은 적게 하고 그 부분을 배의 확장이나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어느 배에건 이익이 된다. 배들은 서로 이와 같이 서로 출자하거나 선원을 상호과건하여 결속력을 강화하여 선단을 형성하게 된다.

⑩ 다른 배와 경쟁하면서 자기의 영속을 도모하는 이 배(= 회사공동체)는 그 승무원들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에게 있어 이 큰 배를 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 그리고 개인생활의 대부분은 배 안에서의 일을 하는데 희생되며 가정은 배를 내렸을때 휴식을 취하고 잠자는 장소가

된다. 이러한 선원들의 생활양식이 회사중심주의이고 선상에서의 생활만이 있는 인간이 회사인간이다.

이러한 일본형 자본주의체제는 일본사회고유의 전통에 입각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다. 1940년체제를 물리는 제 2 차세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취해진 전시체제하에 형성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체제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20] pp.16-17).

이 체제는 제 2 차세계대전을 수행하기 위해 경쟁을 억제하면서 국민전체가 일체가 되어 총력전수행을 위한 자원의 유효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하는 국가총동원체제이었다. 예컨대 금융면에서는 자금을 군수산업에 우선배분할 목적으로 직접금융중심의 체제로부터 은행대부중심의 간접금융체제를 전환시켰다. 또한 현재도 다수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식량관리법도 당시에 제정되었으며 오늘날의 정부행정지도의 기반이 된 각종 산업단체도 그 모체는 1941-42년에 걸쳐 급속히 형성되었다. 균질사회의 기초가 된 교육의 획일화도 1941년의 국민학교령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

경쟁제한을 원점으로 하여 자원의 유효활용을 도모하는 1940년 체제의 틀은 종전후에도 그대로 존존하였다. 그것은 당시 주로 동서냉전의 격화때문에 점령군이 일본의 부흥을 촉진하기 위해 그 체제의 틀을 그대로 지속하도록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체제는 일본의 부흥·고도성장을 지탱하는 유효한 시스템으로서 예상하지 않은 성과를 올려 오늘날의 경제대국 일본을 표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다.

위와 같은 체제의 틀에 의한 일본경제는 오늘날 다음과 같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 p.17).

고도성장메커니즘에 대응하는 시장점유율과 양적확대 그 결과로서의 집중호우식의 수출에 의한 무역상대국과의 마찰이 심각화되고 한편으로 경쟁제한을 원점으로 하는 시스템에서의 행정지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수입규제가 해외의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선진주요국중 일본만이 천수백억달러라는 거액의 경상수지흑자를 내고 있어서 실업의 수출을 세계에 뿌리고 있다 —이론적으로 반드시 옳지는 않으나—라는 비판의 소리도 더 높다.

(2) 앵글로색슨형과 라인형자본주의 ([1] pp.108-109)

앵글로색슨형자본주의는 단기수익, 주주, 개인의 성공이 우선되는 유형이고 라인형자본주의는 목표를 장기적인 배려와 자본과 노동을 결부시키는 사회공동체로서의 기업이 우선시 되는 체제이다. 이 유형은 북유럽으로부터 스위스 그리고 일본도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1] p.126).

알베르는 보험의 두가지 기원 즉 알펜형과 해양형을 대비시켜 다음과 같이 양체제의 차

이를 고찰하고 있다(cf. *ibid.*, pp.108-109).

가장 오래 된 보험은 알프스의 산촌사람들이 16세기에 상호구원목적의 회사를 조직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 알프스의 전통적 조직으로부터 보험, 공제(共濟)의 공동기관이 파생됐다.

이 알프스형의 운영방식은 위험을 모두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이다. 각자의 위험이 발생할 확율과는 관계없이 요금을 부담한다. 즉 연대관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의 내부에 재분배의 형태로 이전된다.

다른 하나의 보험의 기원은 바다이다. 베니스의 화물선박에 내걸린 모험적인 대부금과 관련되어 성립되었는데 그 후 런던에서 크게 발전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런던의 술집 로이드에서 형성되어 영국의 선박이 싼고 있는 홍차라는 화물에 걸려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안전보다는 투기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위험관리에 관심을 쏟는다. 여기서는 재분배나 연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각자의 위험의 확율을 철저하고 정확하게 견적할 뿐이다.

미국에 이식된 앵글로색슨형 자본주의는 카지노자본주의(*casino capitalism*)의 특징을 갖는다고 하며 ((1) p.124) 10년전부터 특이하게 변화된 네오아메리카(*neo America*)형 자본주의는 사회학자인 장 파디오르가 지적하듯이, 산업계의 실업가보다 투기꾼이 권력을 쥐고 쉽게 단기이익을 얻을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회의 부를 잠식하고 있다고 비판되는 것이다(*ibid.*, p.126).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유형과 주주자본주의유형의 특징([45] p.11)

근간 자본주의 유형을 이해관계자자본주의⁽¹⁾ (*stakeholder capitalism*)유형과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유형으로 나누어 양자의 차이를 <표 5>와 같이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본 유형에 미루어보면 전자는 유럽형 및 일본형에 가까운 것이며 후자는 영미형 앵글로색슨형 내지 미국형을 지칭하는 것이다.

(4) 자본주의체제의 본질적성격

이상에서 자본주의체제의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여러 유형의 자본주의체제의 공통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에 대비되는 社會主義에 대한 개념과의 차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40] p.2).

(1) 이를 지주(持株) 자본주의로 번역하나, 소유민주화를 전제로 하는 대중자본주의나 민주자본주의와 개념상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

〈표 5〉 지주자본주수와 주주자본주의의 차이점

	지주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
대표국가	독일, 일본	미국, 영국
경영목표	기업에 관제된 모든 계층에 이익제공	주주에 대한 배당이익최대화
소유구조	종업원과 협력업체들도 지분참여	대주주와 배당이익을 노리는 주식투자자 중심
임금체계	연공서열에 따른 고인금지급	실적위주의 연봉제 중심
종업원신분	강력한 보호나 법적보호장치를 통해 안정	성적여하에 따라 승진과 실적기회상존
복지재원	정부재정외에 기업부당 많음	정부재정이 대부분

(자료: [45] p.11)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私有가 폐지되고 토지나 원료, 공장 및 기계는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국민 전부의 것이 된다. 자본주의하에서도 부분적으 國有化는 되지만 그것은 생산수단의 사유라는 자본주의체제를 보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생산력이 발전하여 많은 富가 창출되면 그것은 국민에 공평하게 분배된다……”

이에서 미루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양체제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바로 생산수단인 자본의 所有體制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인 자본(그것이 貨幣形態이건 實物形態이건)의 소유가 私的이나 아니면 公的이나의 차이에 따라 양체제의 차이가 인정될 뿐. 양자 모두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한 우리는 所有制의 변혁에 의해 자본주의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短絡的으로’ 생각하기 쉽다([41] p.176). 이와 같은 논리의 전개에 대응하여 드러키는 “미국이라는 최대의 공업국에 있어서 생산수단이 社會化되고 있다”([5] p.167)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사회주의를 노동자에 의한 생산수단의 소유로 정의한다면 미국이야말로 사상 최초의 또한 유일의 참된 社會主義國이며 이 정의야말로 사회주의의 전통적 또한 유일의 엄격한 정의”(ibid., p.20)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양 체제는 생산수단인 자본의 소유를 전제로 하되 그 所有樣式을 둘러싸고 대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體制理念이라 할 수 있으며, 양체제의 기본적인 공통성은 바로 둘 다 資本主義의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수 있지 않을까? 사실 윌러스틴도 “사회주의프로그램은 자본주의세계체제내에서 작동한 자본주의체제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19], [46] p.11).

왜냐하면 양 체제 모두 기본적으로 생산수단, 즉 자본을 전제로 하는 사회 내지 경제의 운영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는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그라스가 제시한 私的 企業資本主義의 유형이며, 사회주의는 공공 기업자본주의의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드러커는 社會主義國家로 알고 있는 유고슬라비아를 國家獨占資本主義國家로 보았었고 '소련형사회주의'로 불리워지던 체제는 보다 적절한 호칭을 부친다면 이 또한 국가독점자본주의인 것이다. 그것은 화폐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가격기구가 기능하지 않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는 변칙적인 고정가격시장시스템 이었다. 거시서는 시장의 자동적인 조정기능(소위 보이지 않는 손)은 동결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에 대신하여 국가가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 결정하고 위에서 명령을 내려 경제를 기능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25] p.337).

그러면 과연 소련은 「사회주의로부터 시장경제로 이행」되어 고르바초프가 의도하였던 대로 스웨덴형의 사회민주주의로 연착륙하였던 것일까? 그러나 정치면에서의 민주화가 폭주함과 아울러 경제도 무질서 상태에 빠져 사회주의의 결점은 그대로 남긴채 자본주의의 최악의 요소만 받아들인 '마피아자본주의' 화할 사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되도 있다 (ibid., p.336).

그렇다면 양 체제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자본(capital)이란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자본이란 특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자)되는 재산의 화폐 評價額이다. 경영학상으로는 物財資本과 企業資本의 구별이 있는데, 전자는 기업이 영리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생산수단의 화폐평가액이며, 후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생산수단을 그 지배하에 둘 수 있는 購買力價値를 뜻한다([36] p.280). 이에서 보듯이 자본은 그것이 어떤 형태를 취하건 그 본질은 생산수단이며, 이는 미래에 있어서의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여 줄 가치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財貨形態의 實物資本이나 화폐가치형태의 화폐자본인 것이다.⁽²⁾

자본이라는 용어가 생긴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자를 생기게 할 수 있는 투자된—영어표현에 의하면 invest(투자)되어—총금액을 뜻하였었다([16] p.9). 그런데 이와 같이 투자된 총금액이라는 의미로서의 자본은 화폐자본을 뜻하는데, 이는 바로

(2) 자본의 형성은 “動産이 주로 鑄造貨幣라는 형태로써 발달하게 된 그 날부터 발생하였다”고 하여 화폐자본을 중심으로, 특히 有價證券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관점이 있다([16] pp.8-9). 이러한 관점은 모든 생산수단을 價値-般으로 인식하는 광의의 자본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자본의 축적으로 불리어지는 잉여가치가 資本으로 轉化된 것으로서([11] p.634) 이는 "수익이 자본으로 轉換(conversion of revenue into capital)"([10] p.319)된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현실적으로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은 바로 노동의 성과로써 창출된 잉여가치가 축적·투자되어 변환된 노동의 성과임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과정은 바로 잉여가치의 창출과정과 一體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11] p.220).

이렇게 본다면 자본이란 과거의 人間勞動의 성과가 축적된 형태이므로 통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노동이 신성하다면 노동의 성과로서의 잉여가치가 전환된 형태인 자본도 신성할 수밖에 없다"는 추론을 성립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본은 화폐액으로 보고 있고, 마르크스도 자본의 始源的인 형태가 화폐형태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ibid., p.163). 그러나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자본은 화폐형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미래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려면 마땅히 實物資本으로서의 형태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우리는 자본의 본질적 형태를 擬制的 價値形態인 화폐가치로만 이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롯데는 "貨幣經濟가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북부유럽에서는 이미 13세기에 느끼고 있었다"([9] pp.86-87)고 지적하고, 트레르치가 그것이 미친 영향을 '利得을 위한 이득의 精神'이라 하여 밝힌 내용을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18], [9] p.86).

"이러한 정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곳에서는 모든 價値가 추상화되고 計量化되어 교환이 가능하게 된다. 거기에서는 재산이 流動化되어 여태까지 그 누구도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에 의해 소박한 생활의 바탕이 되었던 자연에서 유리된 경제적 가치로서의 가능성을 단위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화폐에 입각하는 경제의 운영방식은 가치로부터 人格의 要素를 박탈하고, 재산을 추상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으로 되게 하고, 交易과 所有에 관한 합리적인 법규를 만들고, 사람들의 생활을 자연의 상태에서부터 고도화시켜 富의 취득을 先見能力·知能·計數能力과 결합시켰다. 이것이 항상 즉각적인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 물건에만 의존하여 서로에 대한 충성심으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었던 신의 설리에 대한 관념이나 相互扶助·連帶의 정신에 대체 되게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定規的인 抽象的 法規나, 추상적이며 비개인적인 사고방식, 합리주의, 상대주의 등이 발전하게 되었다(中略)……나아가 거기에서 불안정하고 변동적인 社會的 差別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자본은 비단 화폐형태뿐만이 아니라 實物資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생산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資本組織體로서의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주거나 우대를 하는 사회체제인 자본주의의 正統性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양 체제모두 생산수단으로서의 자본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私有냐 公有냐 하는 소유양식 내지 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는 자본을 명확한 자본가계급의 수중에 있는 것으로만 보고 노동자의 수중에 있는 것이라면 동일한 것이되 자본으로 보지 않는다” ([15] p.45)고 슈페터는 지적하고 있는데, 아는 동일형태의 생산수단을 소유계층에 따라 자본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는 생산수단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자본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正統性을 살펴보려면 자본, 나아가 자본의 축적형성과정, 그와 같이하여 형성된 자본에 대한 사유재산권 성립의 정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자본의 私有制度가 용인되는 체제가 자본주의라 할 때 사유재산제도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로마시대 이래로 사회이념상 私的 所有權은 신성불가침시되어 왔다. 왜 그와 같은 사회체제가 형성되어 왔을까? 그것은 자본이 비록 人格과 유리되고 外化된 것이지만 그것이 노동의 產物 내지 成果로서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축적·투자된 것이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신성한 인간노동의 성과의 物化된 형태가 자본이고 그것을 창출한 노동주체인 인간과 축적된 노동성과인 物的 形態 사이에 인격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때 그 자본은 당연히 그것을 창출한 자에게 귀속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자본의 사적 소유 그 자체에는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자본의 源泉的 蓄積은 인간의 신성한 노동의 성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하여 축적된 자본, 즉 재산이 소유권이라는 권위를 정통화시켜 주었고 근거지어주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음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당위성이 있는데도 왜 이러한 체제하에 형성된 資本主義社會는 마르크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었던 것일까?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었다. 산업혁명 이후 성립된 근대적 공업사회에서는 과거로부터의 신분제도가 급속히 붕괴되고 利己的인 打算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공장주가 되고 자본가가 된 유력한 市民階級(bourgeoisie)이 점차 지배력을 가지게 되었다. 종래의 봉건사회에서는 半市民으로서 억압받고 卑賤視되던 시민계급이 대규모공장과 세계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그 財力에 의한 정치에의 작용이 강력해지고 근대적인 代議政治를 확립하여 의회정치를 통해 마침내 독점불이라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지배권력

을 얻게 되었다([34] p.138). 이러한 새로운 공업사회는 자유경쟁사회이므로 많은 양질의 상품을 값싸게 공급하는 자가 이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더욱 강하고 패퇴하여 재산을 잃고 貧民으로 전락하는 無産階級(proletariat)이 되는 사람이 많아진다. 생산된 상품도 구매자가 줄어들므로 판매가 정체되어 과잉생산에 빠지게 되고 불경기가 되어 공황이 발생한다.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가운데 대자본은 공황을 견디어내고 도산한 기업을 買收하여 더욱 거대화되어 간다. 그리하여 한편에서는 더욱 강력해지는 소수의 유산계급과, 다른 한편에서는 그 수가 더욱 많아지는 무산계급의 계급대립이 첨예화되고 마침내 전국적인 계급투쟁이 결집되어 혁명이 일어나 유산계급의 지배권은 타도되고 그 생산시설은 몰수되어 社會共有의 것이 된다. 그리하여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개인적인 생존경쟁이 소멸되고 계급대립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고 보았던 것이다(ibid., p.140).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비판은 영국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初期工業社會의 야만적인 경쟁의 실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석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 이론의 역사적 의의는 종래 가난하여 過少惠澤層일 수 밖에 없었던 노동계급을 격려하여 주었다는 점에 있다고 한다(ibid., p.141).

사실상 賤民資本主義(pariah capitalism)로 불릴 수 있는 19세기적 내지 고전적인 자본주의의 유형은 노동력상품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노동하는 인간을 생산수단시하는 不平等的 人間觀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마르크스는 “새로운 부르주아문명이 재배하는 여러 곳에서 인간과 인간을 연결짓고 있던 재래의⁽³⁾ 인간관계가 무자비하게 단절되고 냉혹한 現金計算이 이에 대체되어 나타났고 가족관계도 금전관계에 의해 좌우되게 되었다. 당시까지 존경의 대상이 되던 직업에서 후광이 박탈되고 승려·시인·학자·법률가·의사·교사 등에 대한 존경의 생각은 점차 사라지고, 이들은 부르주아지에 봉사하고 고용되는 지식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품위는 交換價值속에서 해소되고 양심이 없는 蠶利⁽⁴⁾의 自由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고 신성한 것은 모두 오욕되게 되었다”(ibid., p.139)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자본주의의 여러 유형 중 19세기적 내지 고전적 자본주의 모델에 부합하는 것이다.

(3) 원문에는 '前近代的' 이나 필자가 대체함.

(4) 원문에는 '상업' 이나 필자가 대체함.

Ⅲ. 자본주의체제원리의 재검토

앞에서 보았듯이 경제질서의 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본주의 체제원리는 자유·영리·사유의 3가지이다. 이 체제원리가 제대로 적용된다면 자본주의는 성과가 좋은 체제일 수 있으나 이 원리가 왜곡된다면 자본주의는 천민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마피아자본주의와 같은 형식이 나쁜 유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하 이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유원리

기업은 왜 자유로워야 하는가? “자본주의기업은 이윤추구를 그 존속·발전의 필요조건으로 하지만 우리들의 사회경제 시스템내에서는 기업의 생산능력(productive potential)의 연속화 그 자체가 가치이다. 이 능력의 지속은 기업 및 기업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를 위해 기업가에게는 자유로운 활동영역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6] p.17).

그러면 자유(liberty, freedom)란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자유에는 행동의 자유주의와 사상의 자유주의의 두가지가 있는데 전자는 개인주의와 거의 동의어이다. 그 정의는 “사람들이 하게 될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가능한 선택이나 활동에 장애가 없는 것”이다.([23] pp.29-30).

그러면 우리들의 자유의 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자유를 “욕구충족행위에 대한 장애가 없는 것”으로 정의해 본다면 욕구의 원천은 본능이므로 이를 전제로 하면 동물의 사회를 인간사회의 모범으로 하게되기 쉽다(ibid., p.34) 따라서 인간의 욕구충족행위가 아무런 억제없이 자유방임되면 서로 타인을 해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행동의 자유는 조화를 초래한다는 아담스미스와 그 이후의 경제학자들의 낙관론도 있으나, 비관론도 많다. 따라서 옛날부터 자유론의 중심테마는 개인행동의 자유를 억제하고 알력을 막는 기준의 탐색에 있었다(cf. [23] pp.30-32).

이러한 의미에서 볼때 자유의 본질은 드럭커가 말하듯이 “책임지는 선택”이며 “권리라 기보다는 의무인 것이다”([4], [37] p.137) 따라서 자유개념의 근원은 이성의 자율성이며 “자발성과 자율성에 의한 자유에는 불가피하게 전체에 대한 의무나 당위가 수반되며 또한 그 수행결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책임을 지게 마련이다”([21] p.139).

자본주의 체제는 자유경쟁체제로 불리워지듯이 자유원리는 자유경쟁원리 또는 완전경쟁원리로도 불리는데 이 개념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49] p.50).

(1) 시장에서의 구매자와 판매자는 아주 수가 많고 소규모이어서 거래량을 조작하여 市場價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2) 동일한 산업(= 시장)의 판매자는 거의 동질의 생산물을 공급하며 구매자는 가격 이외에 選好할 수 있는 것은 없다.

(3)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자유로이 시장에 進入(진입)하거나 거기에서 退出할 수 있다.

(4) 구매자와 판매자는 시장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비슷한 정도로 갖고 있다. 따라서 市場情報蒐集의 費用은 이론적으로는 0으로 간주된다.

(5) 시장가격은 저마다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를 추구하여 자유로이 상품을 생산·공급하는 판매자(= 기업)의 공급총량과 소비자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구매하는 소비(= 수요)의 총량이 일치하는 데서 결정된다.

2. 영리원리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기업은 19세기적인 자본조직체관에 입각하여 영리조직체로 인식되었으므로 이윤의 추구는 당연시되었다. 그리하여 경영학상으로는 기업의 권리(력)론이 전개되었다([29] p.63).

영리란 사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원리이다. 이 원리는 투자자들이 자기이익을 추구하고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에 대한 신뢰이며 이러한 신뢰를 나타내는 현저한 언명은 미국의 경우 1919년의 닷지형제 대 포드자동차회사의 재판소의 미시간최고재판소의 판결에서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판결중에서 법정은 “경영자의 주된 의무는 급여소득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한 가격정책의 추진이나 사회전체를 위해 신기술을 광범히 확산시키는 것보다 주주의 이익을 위해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9] p.170).

그러면 이러한 이윤추구가 가지는 사회적 의의 내지 정당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기업이란 본래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판매의 경제단위로 파악되어 이의 유지·존속은 지출을 웃도는 수입, 총비용을 웃도는 수익을 얻을때 가능해진다. 따라서 기업의 손익은 기업환경의 소비자가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수용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판

정하는 표지(標識)가 되어왔다. 다시 말하자면 영리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정당성이나 가치신조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현행의 규범은 기업이 행위를 할 때 당연히 따르는 원칙이었다. 그러므로 이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경쟁에서의 패배와 소멸을 의미하였다. 기업이 획득한 이윤액은 그 기업·국민 내지 국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다”(〔22〕 p.304).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왕성한 투자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영리원리의 도입은 당연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리추구라는 기업가행위는 이론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2가지 단계로 구성된다(〔31〕 pp.91-92, 〔37〕 p.29 註(10)).

첫째는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총생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요소(= 경영자원)를 어떻게 결합하면 좋은가 하는 단계로서 최소비용결합의 단계이며

둘째는 앞의 단계에서 추구된 최소의 총생산비를 전제로 할 때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가격 및 생산량을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가 결정하는 이윤극대화의 단계이다.

이 두 단계를 합하여 “생산자선택의 이론”이라 하는데 자본주의기업의 목적은 흔히 이윤극대화로 이해된다. 이 양단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다.

현대기업은 각종의 이해관계자집단(stakeholder)으로 구성되는 사회적구성체 내지 사회기관(social institution)⁽⁵⁾이다. 자유경쟁(완전경쟁)이 관철되는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이윤극대화지향적 행위는 동시에 각종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익과 일치하는 기반이 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역사를 되돌아 보면 이윤극대화원리가 과도하게 작용하여 왔음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비이윤극대화원리인 욕구충족원리, 공동이익원리, 적정원리 등과 동시에 존재할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전제와 기반에 입각할 때 비로소 이윤극대화지향적인 전통적(신고전적)관리론의 합리성이 정당화될수 있을 따름이다(〔37〕 p.133). 이 때문에 기업소유자의 이윤극대화의 합리성을 넘어선 타당성 내지 정통성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다(ibid., pp.133-134).그러면 이외에 이윤극대화론에 대한 비판적 논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자(〔30〕 pp.241-242).

첫째 미시경제적 균형론에서 유도된 이윤극대화라는 규범은 욕구의 소여성(所與性)이라는 가설의 파탄과 사회적 타당성의 결여때문에 오늘날 그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31〕, 〔33〕 p.57).

(5) '사회적제도체'라고도 한다.

둘째 이윤추구형기업은 기업활동에 따른 외부비경제(negative externalities)는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소득분배에는 영향도 무시한다. 그러나 반면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그리고 실업등의 현실을 고려할때 소유자의 부의 증대만을 지향하는 전통적자본주의기업이 최다다수의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어렵다.

셋째 전통적인 이윤추구형기업은 부당하게 인간노동을 자본, 기계, 토지 등의 생산요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계로서 인간노동을 대체하여 재산이 맞을것 같으면 서슴없이 해고를 단행한다. 또한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기업을 이전한다고 위협하여 임금을 억제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것을 자행(恣行)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의 임금수준이 극히 낮다하더라도 고용자는 관심이 없고 임금인하만을 모색한다.

넷째 전통적인 이윤추구형기업으로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총소득을 극대화하였다고 해서 그 시스템이 공정하다는 것은 아니다. 극대화된 총소득 그리고 또한 높은 평균적 자산은 빈곤층을 회생시켜 생긴 것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윤추구기업에 대한 고전적 견해의 옹호자는 주주에게는 기업의(또는 회사)의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있으나 종업원에게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누구이건 소유권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기업경영상 소유의 의의는 감소되고 있고 소유권은 유동적이다 이해관계자이론(stakeholder theory)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이해관계자의 회생하에 소유자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수 있는 근거도 없다. 실제상 노동자와 같은 이해관계자는 기업이 도산하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다.

기업경영면에서 이윤지향성이 지배적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윤이 지배적인 목적이 되면 그것은 단순히 '우선시' 하는 목적이 아니라 배타적인 것이 되기 쉽다. 이윤은 구체적이고 강력한 주장이지만 윤리는 아주 추상적이고 과정지향적인 것이므로 전자가 우리들의 의사결정을 쉽게 지배할 수 있게 된다([12] p.179). 또한 이러한 이윤중시적 사고양식이 지배적이 되면 기업의 윤리적 규범은 장식물이 되거나 억압되기 마련이다(ibid., p.211). ([47] p.140).

따라서 영리원리의 핵심인 이윤극대화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수정론적인 여러견해가 제시되고 있다([30], pp.242-243).

- ① 회피가능한 위험을 생기게 하지 않고 또한 人格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을 추구한다.
- ② 이윤을 추구함과 아울러 사회적으로도 옳은 행동—사회적 문제를 시정한다—을 하도

록 노력한다.

③ 삶을 유지·향상시키는(life-sustaining and enhancing)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주력한다.

④ 소유자(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3. 사유원리

자본주의기업의 시원적인 형태는 중세기에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여 성립된 개인기업에서 비롯되었다. 이 개인기업은 개인적 자본가가 스스로의 절약에 의해 축적투하한 자본에 입각하여 지배·통제하게 되는데 이 때 기업은 소유자의 자유로운 사유재산으로 파악된다([49] pp.54-55). 토지는 전통적 패러다임인 기업소유자설을 따를 때 "GM은 개인의 창조성이 형성하여준 것이며 사유재산으로서 주주에 의해 소유되며 사유재산은 자연권이므로 그 소유자들은 GM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능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한다"고 한다([9] p.44).

財貨·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제단위인 기업에 있어 물적 수단 특히 물적 생산수단(토지, 장치, 기계, 도구)이 자유로운 사유재산으로서 노동하는 사람과 인격을 달리하는 사람(= 소유자)에 의해 占有(= 私有)되는 것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의 점유와 아울러 근대자본주의 발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라고 웨버는 말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치를 技術的 基軸으로 하고 分業에 입각하는 협동시스템, 즉 공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형성·발전에 있어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정적인 것이다.

이러한 개인기업이 단순한 家業이 아니라 企業이 되려면 기업가 개인의 家計에서 분리·독립된 기업의 손익계산—자본계산의 성립 및 타인의 공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個人企業의 경우에는 기업가개인의 인격, 능력 등이 企業行動展開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단 기업이 실패하면 그 개인의 책임으로 그 손실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업규모의 확대도 기본적으로는 기업가개인의 자기축적의 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49] p.54).

이처럼 자본주의기업이라 하면 전통적으로는 자본가가 소유하는 私的 企業(私企業)으로 인식되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자본주의기업 인식의 바탕이 된 所有—私有란 어떠한 현상을 말하며 그것은 기업과 어떠한 의미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제적 행동, 예컨대 거래를 하는 복수의 주체가 있는 경우 그

행동에 의해 얻게 되는 便益 또는 반대로 손실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기대를 가지게 마련인데, 이러한 기대의 방향은 상호간에 수렴되어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반복되게 되면 그것은 서로의 행동이나 이해를 規制하게 되는 貫習이나 法律 등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⁶⁾ 소유 내지 소유권이라는 현상도 이러한 관습 또는 관습법이 구체적으로 발전된 특정의 행동기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ibid., p.66).

이러한 소유, 나아가서는 이의 原形이라 할 수 있는 占有(실질적으로 특정의 物 내지 사물을 어떤 힘(權力)에 의해 배타적으로 계속 이용한다는 事實로서 의 占有)는 구체적인 物 그 자체나 사물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것들에 대해 일정한 배타적인 권리를 특정의 개인 내지 집단이 行使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웨버는 『經濟와 사회』에서 이러한 점유를 가치있는 무엇인가에 관한 기회를 독점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점유로서 人的 手段과 物的 手段(의 획득)에 관한 두 가지를 들고 있다(cf. ditto).

占有라는 개념을 人的 手段에도 적용하고 있는 것은 웨버의 특징인데 그 예로는 노동자 자신이 자신의 노동을 점유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구체적인 占有形態는 자본주의적 기업의 형성·확립의 하나의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物的 手段의 경우 이를 노동하는 자 또는 그 집단이 점유하는 경우와 비노동자 또는 그 집단이 점유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하나의 유력한 형태로서 共有制가 있으며, 후자의 그것으로는 家産制的 領主에 의한 점유 및 소위 私有(財産)制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所有 또는 占有라 할 때 이러한 물적 수단에 대한 諸機會의 獨占的 制御를 뜻한다.

원시공동체사회에 있어서 물적 수단은 원래 共有制이었다.

18세기 초엽 캐나다의 퀘백지방 라브라들반도에는 다수의 인디언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있어 수달피(beaver) 등 숲에 사는 동물은 중요한 食糧源이었다. 그러나 그 가족은 가족의 의료 의외로는 쓰이지 않았으므로 버렸었다. 그러나 외부와의 모피거래가 활발해지자 土地의 所有形態는 공유제로부터 사유제로 이행하데 되었다. 왜냐하면 공유제하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로이 사냥을 할 수 있었으므로 모피를 팔려는 매력이 亂獲을 하게끔 하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점차 수렵을 규제하려는 동향이 강해져서 18세기에는 季節割當制가 설정되

(6) 이를 '제도'라고도 한다.

있고, 나아가 가족별 수렵지역할당제—예컨대 6마일 사방의 배타적인 토지의 분할제—가 실시되었다. 이때에는 서로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의 표시로 나무 끝을 태웠으며, 家族所有制가 실시된 지역에서는 動物의 生存을 확보하기 위해 저마다 1/4씩 구획을 지어 각 구획마다 연별로 수렵을 하게 하거나 중심부분에는 보통 수렵을 하지 않는 보존지구를 설정하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家族單位의 土地所有는 상속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발전하여 갔다. 이에서 보듯이 여기서는 共有制로부터 私有制로의 고전적인 所有形態의 移行이 이루어졌던 것이다(cf. *ibid.*, pp.67-68).

그러면 왜 이와 같은 土地를 중심으로 하는 물적 수단의 소유형태 내지 양식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일까? 그 까닭은 공유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공유제하에서는 자원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그 비용부담을 하도록 특정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資源의 過大利用을 모두 파악·감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所有對象의 價値를 높이기 위한 노력, 예컨대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누군가가 한다 하더라도 그 보수를 그 사람이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을 하려는 사람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共有制에 내재하는 한계가 강하게 인식됨에 따라 私有制로의 소유형태의 이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기존의 경제구조의 변화, 특히 근대에 있어서의 사회적 분업관계의 철저한 진전이다. 왜냐하면 社會的 分業이 이루어져 각자의 경제행동의 특화(전문화)와 자립화가 진전될 때 만약 공유제가 유지되면 자원 이용과 관련되는 각 경제주체간의 교섭은 아주 번잡해지고 또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社會的 分業이 진전되면 될수록 사유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며 사유제의 확대가 사회적 분업을 촉진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cf. *ibid.*, pp.69-70).

그러면 個人企業은 언제부터 成立 되었던 것일까?

사유제하에서는 소유대상과 관련되는 경제행동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소유자개인에게 집중된다. 즉 私的 所有權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규범이나 제정된 法에 의해 소유자에 대해 소유물에 관해 자신의 의사로서 타인의 개입을 배제하여 자유로이 사용하고 수익을 얻고 처분할 수 있는 힘을 보존하고 있다. 이러한 한도내에서는 자원의 이용형식, 利益損失의 負擔에 관한 교섭을 할 필요는 없다. 財貨·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경제단위인 기업에 있어 물적 수단 특히 물적 생산수단(토지, 장치, 기계, 도구)이 자유로운 사유재산으로서 노동하는 사람과 인격을 달리하는 사람(= 소유자)에 의해 占有(= 私有)되는 것은 노동자에 의한 노동의 점유와 아울러 근대자본주의 발생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전제라고 웨

버는 말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치를 技術的 基軸으로 하고 分業에 입각하는 협동시스템, 즉 공장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형성·발전에 있어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정적인 것이다.

이들 소유자는 소위 個人的 資本家로서 스스로의 절약에 의해 축적한 화폐 내지 물적 수단, 즉 자본에 입각하여 협동시스템인 기업을 자신의 의사하에 지배·통제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위 個人企業이다. 개인기업에 있어 그는 출자자임과 동시에 경영 관리활동의 담당자인 所有經營者이다. 이들 자본가를 기업가 또는 기능자본가라 하였다.

이러한 개인기업이 단순한 家業이 아니라 企業이 되려면 기업가 개인의 家計에서 분리·독립된 기업의 손익계산—자본계산의 성립 및 타인의 고용이라는 분리·독립된 기업의 손익계산—자본계산의 성립 및 타인의 고용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個人企業의 경우에는 기업가개인의 인격, 능력 등이 企業行動展開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단 기업이 실패하면 그 개인의 책임으로 그 손실도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업규모의 확대도 기본적으로는 기업가개인의 자기축적의 규모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함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재산권이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박을 받지 않고 특정대상을 사용(처분포함)하는 권리로 특정대상에 대해 완전한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다는데서 큰 심리적 만족감을 얻는다((9) p.264). 그리고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를 정통화시켜주는 근거가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경우 上場大企業에 私有財産權의 개념을 적용하려 하더라도 그 개념이 아주 애매하므로 이들 기업의 지배를 정통화하는 데에는 거의 쓸모가 없게 되고 있다고 한다((9) p.256).

왜냐하면 로마시대 이래로 신성불가침한 것으로 여겨져 왔었던 財産權概念은 1877년의 최고재판소에 의해 “재산은 일단 公益의 성격을 띠면 더 이상 순수한 私有物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내려진 때부터 붕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ditto).

이처럼 個人이 權利를 정통화시켜 주는 근거로서의 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 때문에 붕괴되고 있다고 한다(ibid., p.257).

첫째는 미국사회⁽⁷⁾의 성격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 소위 “公共의 急務” 때문이다.

(7) 이는 'Community'의 뜻인데 종래의 단층적인 지역사회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웃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서는 모든 세계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ibid., p.4).

둘째는 미국 기업자산의 약 70~80%를 점하는 상장대기업 약 2천社의 소유권의 분산의 진전 때문이다.

이와 같은 財産權의 崩壞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이에 代位되고 있다고 한다. 그것은 생존, 소득, 건강, 교육, 녹지대, 自然景觀 기타에 대한 사회성원 모두의 權利(community member rights)⁽⁸⁾이다. 이는 재산권을 폐지하여야 한다든가 재산권이 惡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권은 부분적으로 적절한 것으로서 존속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人權의 제일의 保證手段 내지 仲裁手段으로서의 지배적인 입장을 잃고 있음은 사실이며 특히 비소유상태하에 놓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 효용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재산권붕괴 현상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cf. *ibid.*, pp.257-263).

첫째, 財産權·所有權이라는 전통적 개념은 기술의 진보에 따라 우리가 손에 넣게 된 우주나 해저부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예컨대 대기권 밖에 우주나 해저는 국제법상 각각 "인류의 공통의 영역 및 유산"으로 정의되고 있듯이 이는 萬人이 公有物인 것이다.

둘째, 稀少資源에 대한 권리는 公有權의 영역으로 移管되고 있다. 예컨대 맑은 공기와 물, 비옥한 토지, 자연의 아름다움, 에너지로서의 연료나 먹고 살기 위한 식량 등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자원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 대신에 두 가지의 상호관련된 개념, 즉 커뮤니티의 요청과 인류와 자연의 조화라는 두 가지 개념에 입각하는 새로운 정통성의 틀 속으로 옮겨지고 있다.

셋째, 都市化에 의한 대규모의 도시의 형성과 거대한 團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들의 所有權은 낡은 재산개념이 보증하여 주던 것과 동일한 혜택을 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새로운 집단 의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넷째, 노동의 성격, 기능과 勞動者의 成就나 自尊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의 경우 5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권리, 즉 커뮤니티의 성원으로서의 生存權을 가지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최저소득, 보건서비스 및 공공 TV와 같은 오락에까지 이르는 권리가 생겨나고 있다. 生存이란 개인주의적인 록크의 사상체계하에서는 개인의 재산인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과만 관련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이와 단절되어 커뮤니티에 의해 보증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成員權으로서의 生存權이 분명히 재산권보다 중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8) '成員權'이라고도 한다([9] p.255).

이에서 보듯이 미국의 기업자산의 대다수를 지배하는 대기업 약 2천社는 점차 낮은 재산개념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特定會社의 株式을 가진다는 것은 그 기업의 수익에 대한 한 조각의 請求權 이상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9] p.264). 주주들이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雇用經營者를 지배한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경영진이 이사회를 임명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을 승인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분명히 非正統的이고 신비적인 自己繼承의 과정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ditto).

따라서 個人主義的이고 財產權指向的인 입장에서 企業支配의 정통성을 찾기는 어렵다. 오늘날 “개인투자자의 자리는 상호기금, 보험회사, 연금기금, 은행신탁부문과 같이 소유관계가 불명확한 去來組織이 차지 하고 있는데, 1963년에 이들 기관투자자는 뉴욕주시장의 거래총액의 35%를 점하는 데 지나지 않았으나 오늘날에는 70% 이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事態의 進展은 자본시장의 구조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관투자자의 지배는 市場의 評價能力의 低下를 초래할 위협을 주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이다([9] p.266).

“앞으로 10년내에 시장과 기업이 비교적 소수의 기관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게 되어 현재 유럽이나 일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산업사회가 다가오리라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이하여 正統性을 상실한 기업은 경제적·정치적·사회적인 상당한 잠재력을 가졌으면서도 이미 붕괴된 재산권에 집착하여 理念의 眞空地帶에서 표류하는 위험상태에 놓여 있어서 단순한 人과 物의 집합체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못지 않는 지적하고 이들 기업이 앞으로도 존속을 도무하려면 새로이 사회내에서 그 정통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ibid., p.267).

그러면 누구에 의해 이와 같은 正統化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범주에 걸친 문제가 검토되어야만 한다고 한다(cf. ditto).

첫째, 기업집단과 그 영향을 받는 사회 즉 커뮤니티간의 외적관계와 관련되는 문제

둘째, 조직체내의 내부구조와 이와 관련되는 경영관리의 원인과 집단의 규율에 관련된 문제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소유와 관련되는 패러다임은 ‘사적소유—사회적소유패러다임’에서 ‘개인소유—기관소유패러다임’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34][32] p.34).

따라서 “현대사회의 혼란의 궁극적인 원인은 이미 조직체 중심의 사회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재산중심사회의 제관념속에서 살면서 조직체중심의 윤리를 수반하는 제관념이 성숙되지 못한데에 있다…… 이미 사회기반은 새로운 것으로 바뀌었음에도 이에 상응(相應)하는 사상, 신조, 이상, 윤리,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하고 낡은 기반에 대응하여 성립된 제관념이 그대로 남아 횡행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35] p.53).

IV. 맺는 말

이상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체제의 틀인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인지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개념과 제 유형의 다양성을 살펴보고 이의 본질적 성격과 체제원리를 개관하였다.

자본주의란 ‘화폐의 증식을 지향하는 게임이며 이 게임에 투자된 화폐를 자본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이처럼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된 화폐게임(money game)으로서의 자본주의는 어디까지나 어떤 형식의 독점적우위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완전 경쟁형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성과는 반드시 같지 않다. 오늘날 ‘거품경제’, ‘마피아자본주의’, ‘죽음의 상인’ 등으로 불리는 유형의 게임에서는 투기목적에 의한 토지의 빈번한 전매행위, 전쟁·분쟁당사국에의 무기수출, 증권법을 어기는 것은 아니나 손실보전, 매수자거래 등과 같은 불공정한 행위를 하기 마련인데 이는 행실이 나쁜(illbehaved)자본주의이다. 이러한 나쁜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대응방식이 있다고 한다([25] p.353).

- ① 명확한 규칙(법률, rule)위반이 아니면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의 원칙을 관철한다.
- ②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행위는 규칙을 제정하여 규칙위반으로서 게임에서 배제한다.
- ③ 규칙의 변경보다는 의사결정의 주체인 행위자의 자율적인 자제 방식에 의해 행실이 좋지 않은 행위를 억제한다.

스미드(A. Smith)는 그의 「도덕감정론」에서 사회적으로 시인될수 있는 타당한 행동의 기준은 입장을 바꾼 경우의 공감(sympathy)라 공평한 관찰자의 눈을 의식한 자제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다. 각자가 자유로이 자신의 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면서도 이러한 자제를 통해 그의 행동이 타당한 행동의 범위안에 머뭇으로써 전체로서의 자연적인 질서

가 형성된다는 아담 스미드식의 예정조화론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이 풍부하고 입장의 상상(想像)상의 전환을 할수 있는 개인과 개인간의 관계, 그것도 분별력이 있고 성숙한 개인 사이의 관계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기업에 요구되곤 있는 '기업윤리'나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이와 같은 '세상(= 사회)의 눈'을 의식하여 비난받을 행동을 자제하거나 나아가서는 '세상의 요구하는 바'에 대한 기업의 적응행동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담 스미드의 '공감과 자제의 모델'이 시사하듯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이 사회적 시인을 받을수 있으려면 개인은 물론 기업도 현명한 자제에 더하여 예컨대 기업자선(corporate philanthropy)과 같은 가시적인 선행(善行)도 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기업이 선량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으로서 사회에 수용될때 비로소 이윤추구게임이 시인될 수 있는 것이다.

스미드 이전에도 만데빌은 사익추구라는 一見 악으로 보이는 행위의 집적이 사실은 전체의 이익이 되고 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一見 이타적으로 보이는 불리한 행동이 사실은 전체의 이익의 증진을 통해 결국은 사익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복잡한 룰(loop)이 있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새끼를 구하기 위한 어미의 자기희생적(이타적)행동을 볼수 있는데 R. 도킨스에 의하면 이는 결국은 자기의 유전자를 확실히 남긴다는 '유전자레벨에서의 이기주의'와 합치하는 것이라 한다. 경제게임인 자본주의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성숙하고 세련된 자본주의 하에서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장기적·대국적으로는 자기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윤리나 기업의 윤리는 이러한 맥락하에 이해할 필요가 있다([25] p.355).

나아가 지원과 에너지 소비형의 자본주의는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비행(非行)을 억제 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적극적 공헌도 하도록 기대되고 있다. 또한 냉전의 종식으로 동서대립대신에 남북대립 즉 자본주의 게임에 익숙한 풍요한 사회와 미숙하고 가난한 사회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적 규모에서의 부의 재분배나 국가적 자선(national philanthropy)도 국제공헌의 차원에서 선진국의 중요한 책무로 지적되고 있다. 옛부터 자본주의 비판의 표적이 된 빈부의 격차를 둘러싼 윤리적 비판이 오늘날엔 일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일고 있다([25] pp.353-354).

행실이 좋은(well-behaved) 자본주의가 바로 응답자들의 인지의 틀속에 내장되어 있는 자본주의의 이미지가 아닐까? 행실이 좋은 자본주의가 뿌리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본주의체제의 틀속에서 행위를 하기에 앞서 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역사의 주역인 역할수행자(role actor)의 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헤겔-후쿠야마적 도식에 의하면 역사를 움직여온 원동력은 '인지'를 얻으려고 투쟁하는 인간의 기개(氣概 = 정신적자세, 마음가짐?)라 한다. 인간은 '인간으로서 취급되는 것' 즉 인지를 얻고자 싸우며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데 '더 많이 먹고 싶다'는 욕망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지는 않는다 한다. 사람들이 가난을 참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게 취급되고 때로는 인간이하의 생존을 강요받는 비참함과 굴욕때문이며 단순히 생활의 수단이 모자라기 때문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자본주의의 체제원리 중 자유는 방종이나 자유방임이 아닌 자율에 입각한 자제를 통해 어울리는 질서자유주의([1] p.144)이어야 하며 영리는 단선적인 탐욕에 입각하는 사익추구가 아닌 후회적인 사회이익의 증진을 통한 자기이익의 추구이며 사유는 재산원의 바람이 되는 소유의 심리적 질곡에 얽매인 소유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산업과 경제의 발전을 위한 자금제공자로서의 기능에 투철한 주주의식에 입각한 '소유자없는 자본주의'(cf.[1] p.96)의 이점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체제원리가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슈페터는 기업가사연구를 통해 경제발전상 혁신자(innov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가라는 인간적요인을 강조하였는데 기업가가 수행하는 역할은 의사결정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상 행실이 나쁜 자본주의는 결국 이들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유경영자(owner-manager)인 기업가의 의사결정의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861-64년에 걸친 남북전쟁이 끝난 후의 소위 '금박시대'(gilded age)로 불리워진 미국자본주의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던 때의 기업가는 소위 '도둑귀족'(robber barons)으로 불리워졌었는데([38] p.24) 그들에 의해 운영된 자본주의가 행실이 좋은 자본주의일수 있었을까?

해방이후 우리나라에도 도적귀족에 준하는 '정상모리배'(政商謀利輩)라는 개인기업가가 횡행하였는데 정상(政商)이란 일본의 명치초기에 형성된 특별계층으로서 정당이나 관료와 결탁하여 부당하게 치부를 한 상인을 말한다. 따라서 명치초기의 일본자본주의를 정상자본주의로 부르고 있다(cf. *ibid.*, pp.44-45). 이들 정상이 운영하던 기업조직은 점차 확대·조직화되어 재벌로 성장하였다([38] p.48).

명치정부는 다른 많은 후진국의 정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봉건적 정치체제에 대체되어 성립된 것이 있으나 절대주의적 특질을 잔존한 중상주의적 정부이었다. 정부는 부국강병의 슬로건아래 관업(官業)의 경영과 그 불하, 보호관세, 민간기업에의 보조금, 특권의 부

여 기타방법에 의해 자본주의산업의 보호·육성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정부정책이 필연적으로 정상을 생기게 하는 온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실이 좋은 자본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기업의 경영의사결정을 맡고 있는 기업가를 포함한 경영자계층의 의사결정의 효율화와 윤리화를 위한 가치의식혁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참 고 문 헌

- [1] Albert, M. (1991), *Capitalisme Contre Capitalisme*(K. Tr. —同韓譯書), Paris, Editions du Seuil.
- [2] Boone L.E. & D.L. Kurtz, (1995), *Business*, New York, The Dryden Press.
- [3] Drucker, P.F. (1950), *The New Society-The Anatomy of the Industrial Order*, Harper & Row, (J. Tr.).
- [4] Drucker, P.F. (1942), *The Future of Industrial Man*, New York, Harper & Row.
- [5] Drucker, P.F. (1976), *The Unseen Rrevolution -How Pension Fund Socialism Came to America*, New York, Harper & Rows, 1976. (J. Tr.).
- [6] Enderle, G. et. al., ed., (1990), *People in Corporations*, Boston, Klower Academic,
- [7] Gras, N.S.B. (1938), "Why Study Business History,"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s*, Vol. 4, No. 3.
- [8] Heilbroner, R.L. (1980), *The Worldly Philosopher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9] Lodge, G.C. (1975), *The New American Ideology*, New York, Alfred A. Knopf, 1975. (J. Tr.).
- [10] Malthus, T.R.(1936),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2nd ed., London, Cambridge Univ. Press.
- [11] Marx. K. (1906), *Capital: A Critique of Political Economy*, New York, The Modern Library, Charles H. Kerr & Company, 1906.
- [12] Nash. L.L. (1990), *Good Intentions Aside: A Managrr's Guide to Resolving Ethical Problems*, Havard Business School Press. (J. Tr.).
- [13] Petit, T.A. (1969), *The Moral Crisis in Management*, New York, Mcgraw-Hill Book Co. Inc.(同日譯書).

- [14] Pryor, F. (1973), *Property and Industrial Organizations in Communist and Capitalistic Nations*,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 [15] Schumpeter, J.A. (1950), *Capitalism Socialism & Democracy*.
- [16] See, H., (1926), *Les Origines de la Capitalisme Moderne*, Paris, Libraire Armand Armand Colin (同日譯書).
- [17] Sombart, W. (1930), "Capitalism," *Encyclopedia of Social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The Free Press.
- [18] Troeltsch, E. (1931),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 (Tr. by Wyon O.), Vol. 1, New York, Macmillan Co.
- [19]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1*, New York. A.P.
- [20] 原田和明(1994), 「價格革命, 日本企業の挑戦, 大轉換期への戦略對應」,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21] 鈴木辰治(1992), 「現代企業の經營と倫理」, 東京, 文眞堂, 1992.
- [22] 鈴木辰治(1992), "現代企業の倫理と經營者の役割" 研究年報, '經濟學' 53-3, 1월.
- [23] 村上泰亮(1992), 「反古典の政治經濟學, 上」進歩史觀の黃昏」, 東京, 中央公論社, 1992.
- [24] 村上泰亮, (1992), 「反古典の政治經濟學, 下: 21世紀への序說」, 東京, 中央公論社, 1992.
- [25] 竹内靖雄(1992), 「正義と嫉妬の經濟學」, 東京, 講談社.
- [26] 望川幸義, 安田幸正, 編(1991), 「Global時代の經濟倫理」, 千葉, 廣池學院出版部.
- [27] 竹内靖雄(1991), "新しい資本主義と企業の倫理," 「公正取引」, No. 483, 1월.
- [28] 金日坤, (1991), "儒教倫理の現代經濟への適用—家族集團主義文化を生かす—," in.[26]
- [29] 正木正司(1990), "株式會社の倫理" 「同志社商學」.
- [30] 中村義壽(1990), "利潤の paradox—企業經營における倫理と利潤" 名古屋學院大學論集, 社會科學篇, 27-1, 7월.
- [31] 鈴木辰治(1986), "現代ドイツ經營經濟學の—動向—規範的行爲科學としての構成主義經營經濟學" in [33].
- [32] 日本經營學會 編(1986), "現代經營學の新動向," 「經營學論集」, 第56集, 東京, 千

倉書房.

- [33] 岡本康雄(1982), 「經營學 人間 上」, 東京, 日本經濟新聞社.
- [34] 三戸公(1986), “機關所有と支配—私的所有・社會的所有 Paradigmの 終焉,” in [32].
- [35] 三戸公(1985), 「現代の學としての經營學」, 東京, 講談社.
- [36] 占部都美編(1980), 「經營學辭典」, 東京, 中央經濟社.
- [37] 鈴木辰治(1977), 「經營と 經濟體制—ドイツ經營學研究」, 東京, 文眞堂.
- [38] 小原敬士(1971), 「Big Business論」, 東京, 丸善株式會社.
- [39] 栗田眞造(1971), 「經營史學, 經營學全書 4」, 東京, 丸善株式會社.
- [40] 鹽原 他編(1969), 「社會學の基礎知識」, 東京, 有斐閣, 1969.
- [41] 北澤方邦(1968), 「構造主義, 東京」, 講談社.
- [42] 陸井三郎(1958), 「社會主義 對 資本主義」, 東京, 講談社.
- [43] 매일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
- [44] 매일경제신문, 1997년 4월 22일자.
- [45]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16일자.
- [46] 中央日報, 1996년 11월 26일자.
- [47] 金元銖(1995), 「經營倫理論」,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5.
- [48] 金元銖(1991), 「企業環境論, 變化, 適應 그리고 創造」, 서울, 茶山出版社, 1991.
- [49] 金元銖(1990), 「現代企業論—企業經營學序說」, 서울, 文音社, 1990.
- [50] 金元銖(1989), 「經營學論考」, 서울, 文音社.
- [51] 金元銖(1988), “經營學과 體制關聯的認識,” 「經營論集」, 서울大學校經營研究所 pp.21-24, 12월.